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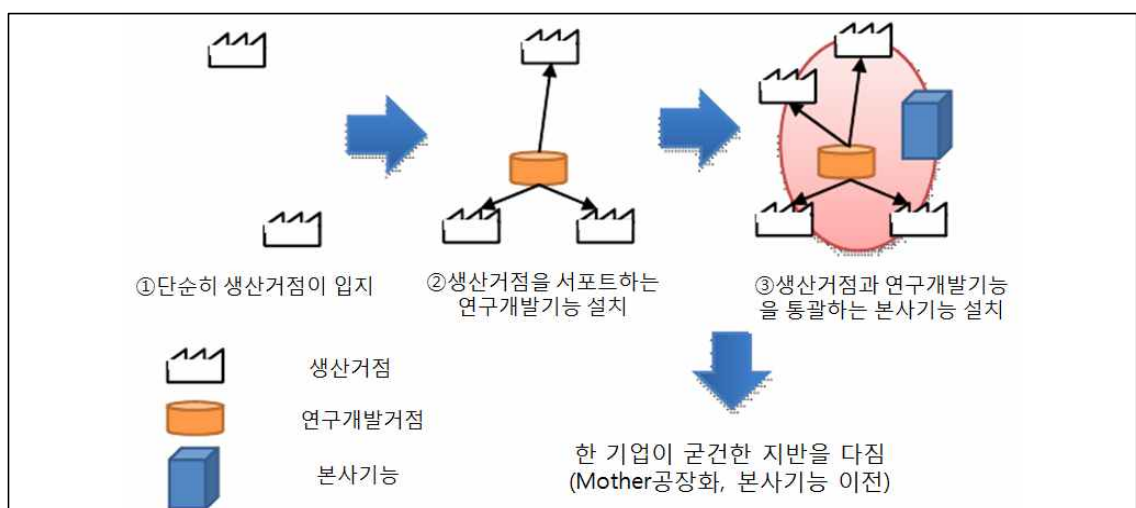
R&D 융복합산업집적지 조성 정책 의견

2014.9.16. 목원대 박 경 교수

1. 사업배경과 타당성

- 향후 수도권외의 규제완화와, 기업(공장)의 해외이전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공장유치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것임.
- 한국에 남는 대기업 공장은 연구개발형 또는 시작(試作)형 공장으로 변모하면서 공장과 연구소의 차별성이 약화될 것임. 이미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
- 충남의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지역은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불과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의 R&D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적지임.
-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수도권의 R&D기능과 본사기능의 지방이전은 주요 과제임.
- 충남 경제는 생산거점만 있는 대표적인 분공장 경제이므로, 유치 후 지원을 확충하여 생산거점으로부터 연구개발기능, 전략거점(본사기능)으로 기능고도화로 이어지도록 투자를 유발시키는 것이 필요함.

<그림 1> 분공장의 기능고도화



2. 검토 과제

① 수요가 있는가?

-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대 파워텍, 현대 다이모스, 오스템(이상 대기업)은 본사가 충남에 있으나, 연구소는 경기도에 있음. 또 우신공업은 연구소는 울산에 있음. R&D 융복합산업집적지를 만들 경우 이런 업체들의 연구소 이전이 일차 대상이 될 것임. 따라서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주요 업체의 연구소 소재지를 조사하여 수도권에 있는 경우, 충남에 융복합 지구를 만든다면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, 어떤 여건 조성이 필요한지 개괄적인 파일럿 조사를 우선 해 볼 필요가 있음.
- 연구소를 외지에 두고 있는 상기 업체 이외에, 충남에 연구소를 공장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(예를 들어 시그너스 정공, 영화테크 등)도 집적지를 만들면 옮겨 올 수 있는지 기업들에게 사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.
- 충남소재 벤처 기업들도 KTX 역사 근처에 집적지를 만들면 연구소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, 과연 얼마나 이런 기업들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므로 조사가 필요함.

②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제도는?

- 현재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, 지식기반집적지구,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연구단지, 연구개발특구,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나, 충남이 구상하고 있는 R&D 융복합산업집적지 개념과 잘 부합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, 산업부의 지식기반집적지구,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그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제도들도 지원규모가 작고,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활용한다고 해도 충남의 구상을 실현하는데는 매우 제한적임.
- 따라서 발상을 전환하여 수도권 오피스 및 본사, 연구소 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의 창조거점 조성이란 큰 개념하에서 새로운 중앙정부 제도를 창출하

도록 하고, 충남이 이런 제도의 선도 모델지구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③ 추진전략

- 향후 몇 차례의 워크숍과 사전 수요조사 및 여건검토를 더 거쳐 산업부 또는 미래부 어느 부서를 주 타겟부처로 삼을 것인가 정해야 할 것임.
- 충청도내에서도 이 사업안의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사업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.